

데스크 시각

‘국민 행복시대’의 비극



최재호 사회부장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항상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저만치 멀리 놓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장수(長壽)는 최고의 복(福)이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을 이렇게 많고, 끊이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에 이어 생활고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광주·전남에서도 잇따랐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허술한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

망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각 구청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미흡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다.

또한 각 구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가정에 구명줄과도 같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허술한 복지시스템 개선 시급

지난 13일 광주에서도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며 힘들어 하던 30대 부부가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부부는 아빠 일마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이 결국 발달장애 판정을 받아, 가족으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부담과 고통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취약한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자폐증, 다운증후군 등을 지닌 이들이나 발달장애인은 인지력·표현력·자기결정력이 부족해 상인이 돼도 자립

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적장애를 동반할 때면 차별이나 학대 혹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자신보다 하루 먼저 눈을 감는 것”이라며 “국내에는 전문 시설이 없어 아이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부모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 당사자가 되지 않고선 가족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법은 지난 2007년 발의된 후 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에 이어 ‘무상(無償) 대중교통’ 공약이 나올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다.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부자들에게까지 똑같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다. 사회 규율과 규범의 혼란 여부에 따라 자살의 증가 정도가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현대는 경제난, 고령화, 양극화, 가족 해체 등에 의한 사회 해체 징후가 심각히 표출되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통사회 해체에 따른 고립과 소외는 물론이고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궁핍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때에 ‘국민 행복시대’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 등 허울좋은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이제 방치된 채 홀로 외로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식과 기본 원칙이 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온갖 복지 시책이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l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항군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치킨게임의 역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행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불안감, 다시 말해서 삼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을 과도한 선행 학습의 치킨 레이스에 올려놓은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이 발표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2014년 자연계 논술 문제 분석 결과’를 보면 현상이 심분 이해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난제이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여전하였다. 논술 문제가 대학 교재 ‘정수론’에서 인용되어 출제되고, 대학 해석학개론에 나오는 함수열 기호 f(x)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한 대학 과정 출제율도 6개 대학은 증가, 6개 대학은 하락, 1개 대학은 유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마련 절차에 들어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원 등 사교육 업체를 제외하고 공교육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부터, 국어 등 일부 과목은 선행학습의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점, 대학의 서열화 속에

서 입시 위주로 진행되는 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한 정책이란 비판도 많다.

일례로 공교육 현장에서 2학년 말까지 3년 과정을 정리하고 3학년 때는 수능 시험일까지 EBS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해왔던 관행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이 1년에 서너 차례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수능)도 마찬가지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와 같은 경우 학교마다 배우는 학년이 달라 출제 범위를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에서 고3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마지막에 가서 통로를 열 어주는 것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EBS 문제 풀이가 고교 교육의 본질인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입 준비를 위한 모의 평가가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결국 입시에 공교육이 매달려 사설 학원과의 경쟁 구도를 지속하는 한 선행교육의 치킨 레이스로부터 공교육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레이스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두고, 공교육만 선행학습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대학이 서열화 된 상황에서 대입을 향한 목표가 중요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입안은 선행학습을 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는 데 보편의 취지가 있다. 타의에 의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고,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공교육에서부터 찾아가려는 디딤돌인 셈이다.

이미 창의적 융합, सह출형 및 창의사고력 평가의 확대 등 각종 교육 정책은 진도 우선의 선행보다는 학습한 개념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고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가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용 및 사고력 확장을 위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오히려 잃어가는 학생의 입장에서 치킨 게임 결과를 생각한다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 도출도 중요할 것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참말로 잘 생겼다!



최용철 광주지방조달청장

서비스가 있을까? 우선 지난해 말 개봉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도급지킴이’를 들 수 있겠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기관과 원·하도급자의 하도급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이다. 이는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각 수급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원·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 모든 공사 관련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 정착 되면 이면계약이나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비정상적인 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지역 소재 광역지자체

와 지역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 마음 한 편이 뿌듯하다.

다음으로는 나라장터 민간개방이다. 나라장터는 조달업체 등록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불까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2002년 서비스가 시작 된 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4만 6773개, 조달업체는 26만 7963개에 달한다.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72.7조원으로 한해 공공조달시장(약120조원)의 60%를 넘는다. 이처럼 나라장터가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조달업무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단지와 영농·영업조합에 개방했고 2016년까지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및 법인까지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특히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개방과 공유의 대상을 공공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확대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를 위한 물품,공사,용역 조달 시 나라 장터를 이용한다면 민간부분 조달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비용 및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전국적으로 반응도 좋아 얼마 전 민간수요자 등록기관이 1000개를 넘어섰고 전자입찰도 1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3월 현재 107개 기관이 등록하였으나 입찰 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아직은 호응이 조금 부족하다. 을 한해 나라장터 민간개방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해오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클라우드 기반 가상입찰서비스’이다. 가상 입찰 서비스를 통하여 해킹에 취약한 이용자 PC는 화면만으로 사용하고, 예정가격작성 등 중요 입찰 업무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안전지대인 가상화 서버에서 처리하여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보안성이 약한 공공기관, 조달업체 PC에 악성코드를 감염 시켜 입찰정보를 빼내거나 자료를 위·변조하는 것을 예방 하여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위에서 말한 혁신의 산물들이 수요기관 및 거래기업, 민간에게 ‘참말로 잘 생겼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 바랍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무상교통 공약, 대책 없는 선심성 아닌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이었던 것처럼,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민주당 이낙연·주승용 의원 등이 버스(준)공영제 단계적 실시와 100원 콜택시, 여객선 공영제 등 무상교통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무상교통은 전남지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벽지가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이 최근 공약으로 내건 버스(준)공영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100원 콜택시 공약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 주민을 위해 100원만 내면 승객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주승용 의원의 여객선 공영제는 배편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주민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해운사

들의 부담을 줄여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

이들 후보들이 주장하는 무상교통 공약은 이미 신안과 충남 서천군 등지에서 실패를 거두고 있기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전남지역에 이를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공약대로 무상교통을 실시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전남은 지난 2012년 말 현재 도(시·군·제외)와 지방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만 2조8177억 원에 달한다. 이자만 해도 1천억 원대가 넘는 데 무상교통까지 현실화된다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원은 생각하지 않은 채 표를 끌어모으려는 선심성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고 보자는 식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만 받을 뿐이다. 빚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

대학들 ‘주차 장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전남대와 조선대 캠퍼스가 넘쳐나는 차량으로 혼역을 앓고 있다.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만이 아니라 대학 당국이 학교 주차 공간의 2배가 넘는 주차권을 팔아 학생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실태를 보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상아탑에서 교수들의 연구 활동 및 학생들의 변화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전남대의 경우 해내 주차 공간은 2623면인데 비해 유료 주차 등록 대수는 1.5배에 이르는 4154대나 된다. 정기 주차권 없이 학교를 드나드는 차량도 적지 않아 매일 학교 안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조선대의 경우 형편이 더 좋지 않다. 학교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 공간은 3959면에 불과하지만 2.5배가 넘는 9900대에 대해 장기 주차권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중 시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

차권 발급을 제한하고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근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내 도로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강을 위해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은 곳곳에 자리 잡은 복잡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중종 사고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주차 공간 확보 및 불법 주차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주차 면적과 관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곤란하다는 대학 측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들에 따르면 현재 주차 수익이 한 달 평균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말이다. 주차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주차권을 파는 ‘주차 장사’는 이제 당장 그만 뒤야 한다. 그리고 주차 공간 확대와 불법 주차 단속은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無等鼓

투키다데스와 헤겔, 마르크스 등 수많은 역사가와 철학자들이 지적했듯 역사는 되풀이된다. 잘 살펴보면 과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시간과 장소, 사람만 달린 채 현재 진행 중인 경우가 적지 않다. 멀리 시간을 거슬러올라가지 않더라도, 눈부시게 발달한 정보·통신 수단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사건들이 동시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터키에서 반정부 민중시위를 천문화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자축할만 헤르도안 총리 식에 맡겼다는 점에 터키 총리와 전 대통령은의 사건은 그야말로 판박이다. 드러내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뿐, 과거의 전제군주를 비롯한 현재의 독재자와 숨은 권력자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전례를 사들였고, 또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처음엔 비극(tragedy)으로, 다음엔 익살극(farce)으로”라고 말했지만, 그도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남이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런 역사, 그런 권력자를 견제해야 하는 국민에게 잔인한 이야기라는 점을.

/홍행기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도둑의 아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